

제14권 10호

2024. 5. 13~2024. 5. 26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채무조정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 이슈분석**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 금융경영브리프** 레그테크를 활용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투자 가뭄 속에서 핀테크 옥석 가리기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파월의 고용 중시 발언 부각되며 하락
외 환 : BOJ와 시장 간 '맞다이'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송형은(hesong)

논단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남주하

이슈분석

연구위원 황선경(skhwang)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김종현(jh.kim_)
연구원 정안선(ansunc)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김용태(ket1006)
외 환 | 연구원 진옥희(okheejin)

금융지표

연구원 방승연(sybang)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채무조정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 06 **이슈분석**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 10 **금융경영브리프** 레그테크를 활용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투자 가뭄 속에서 핀테크 옥석 가리기
- 14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파월의 고용 중시 발언 부각되며 하락
외 환 : BOJ와 시장 간 '맞다이'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채무조정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남 주 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가 장기화 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¹⁾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금융불안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장기연체자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사전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채무조정 대상 확대, 이자율 감면 확대, 변제기간 단축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저성장의 장기적 지속, 소득 양극화, 금융 양극화 등으로 인해 중·저신용자들의 경제·금융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또한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는 자영업자, 저소득·저신용자,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와 금융이용의 제약 등을 심화시켜 더욱 어려운 금융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 안정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급격한 가계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금융불안정은 더욱 악화되어 가계파산 위험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에서 현실로 드러난다. 그리고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사전(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의 신청 및 확정자가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중·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장기연체자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사전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사전채무조정제도의 특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등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지원하여 연체의 장기화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자율 감면, 연체이자 경감, 상환기간 유예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저성장, 인플레 등
여파로 서민
금융불안정 심화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위한 근본대책 필요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적 안정성, 자활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체 장기화를
예방할 사전채무조정
중요

사전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 대상(연체 3개월 이상이나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 부실화되기 이전인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2009년 4월에 시행된 후 현재까지 지원 범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워크아웃처럼 원금과 이자 감면은 없으나 연체이자 경감, 이자율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활용하여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2018년 1월에는 기존의 이자율 감면 방식에서 최고이자율을 10%로 하는 상한선을 지정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약정한 이자율의 최대 65%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게 하였다. 2021년 10월 이자율 감면 방법이 크게 변경되어 무담보채무에 대해 약정 이자율의 50% 내 감면이 30~70% 범위로 확대되고, 최고이자율은 8%, 최저이자율은 3.25%로 개선되었다. 또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약정 이자율의 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다.

일정한 성공에도
실효율이 높아
제도개선 필요

이자율 감면은 연체이자 경감, DSR 감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변제 성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효(효력상실)율이 30% 이상에 달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효할 가능성은 채무액이 클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평균이자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신속채무조정제도의 특징

잠재 연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재건 위한
신속채무조정 주목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지속되면 채무가 급증하고 금융활동 제약이 커져 재기 가능성이 제약되므로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속채무조정은 정상채권인 잠재 연체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채무조정제도에 비해 원금 감면이나 이자율의 대폭 축소가 없어 채무조정 수준이 낮은데, 기한연장, 상환연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개인/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들어가기 전에 시행하는 긴급구제로서 상환유예 등의 기간은 1년이며, 종료 시점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재진단하여 정상상환으로 복귀하거나 개인/프리워크아웃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는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며 보유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정상이행 포함)이

고 일시적 가용소득 감소로 인하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로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로 제한한다: (i)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ii)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질환자, (iii)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최근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30일 이하 연체 중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iv)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2019년 출발한 신속채무조정제도(2022년 중 일부 한시적 확대)는 시행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특성분석이나 실효율과 관련한 정교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좀 더 축적된 후에 가능해 보인다. 다만 신속채무조정제의 실효율도 사전채무조정제도와 유사하게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채무액이 높을수록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평균이자율이 높을수록 실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채무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사전·신속 채무조정제도는 잠재 및 단기 연체자들의 장기 연체자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까지 신용회복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와 같이 어려운 금융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저신용자,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건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효율이 높은 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한 정책적 개선이 중요하다.

(사전, 신속 채무조정제도의 대상 확대)

현재 사전채무조정 대상은 채무 연체기간이 30~90일 사이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 대상은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인 채무자(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되어 있으나 대상 범위를 좀 더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전적 신용회복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신속 채무조정제도의 본래 취지가 채무자의 장기연체화를 예방하는 데에 있으므로 대상을 현재보다 좀 더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시기가 짧아
아직은 효과 불분명

사전적 신용회복
장치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대상범위 확대 필요

또한 DTI 및 DSR이 미래의 잠재 부실을 예상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용평점보다는 DTI 및 DSR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신속, 사전 채무조정제도의 대상, 정책수단 등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자율 감면 확대)

유효성 제고 위해
이자율 감면 폭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

현재 사전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이자율 감면은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하고, 최저수준은 3.25%, 최고 수준은 8.0%로 제한하고 있다. 이자율 감면이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현재와 같은 이자율 감면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 감면 폭을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자율 감면 수준을 30~90%까지 확대하고, 최저수준도 2% (실질이자율 0%, 한국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 2%를 감안)까지 인하하고, 최고 수준은 5%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취약계층,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는 약정이자율의 70~90%까지 인하하되 최저수준은 2%로 유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원금 일부 감면 검토)

재무여건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은
채무원금 일부 감면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 채무자에 비해 DTI 및 DSR이 높고, 따라서 실효율도 일반채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재무상황이 일반 채무자와 비교하여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이자율 감면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무감면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의 채무감면율보다는 낮은 20~50% 범위 내에서 소액채무(예,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채무원금을 일부 감면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채무변제기간의 단축과 감면을 산정 체계방식의 단순화)

개인워크아웃제도도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채무조정(변제) 기간의 단축이 중요하다. 현재 개인워크아웃의 채무변제기간(8년)이 너무 길어 신용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월채무상환 금액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을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감면을 산정과정에서 채무 변제기간을 선택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자의 적절한 월상환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나치게 긴
채무변제기간 단축
및 부채 감면을
산정방식 개선

채무조정 기간을 5년으로 고정시킨 후 변제기간 내의 소득과 총부채액을 감안하여 감면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채무변제기간의 단축으로 감면율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감면율의 상한인 70%를 8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들의 사적채무조정 제도의 변제기간이 5년 내외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표] 주요국의 사적채무조정제도 비교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채무조정 중재기관	NFCC 등 민간단체	CAB, SCDC 등 민간단체	변호사, 소비자 단체 등	크레디트카운 셀링협회, 변호사	신용회복 위원회
조정대상 채무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협약가입 기관채무
신청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 채무액, 자산 등 자격제한
변제기간	3~5년	최장 10년	통상 6년	3~5년	최장 10년

(「국민행복기금 II」 출범과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22.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의 피해로 부실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하여 신용회복을 도모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거 국민행복기금의 출범(2013.3)으로 저소득·저신용 장기 연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경험한 바 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율의 적정성에 대한 소고”, 남주하 외, 2014) 코로나 19의 충격과 저성장의 지속에 따른 저신용·취약계층의 재무상황, 연체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 「국민행복기금 II」의 출범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새출발기금’의
성공을 기반으로
‘국민행복기금 II’도
고민할 필요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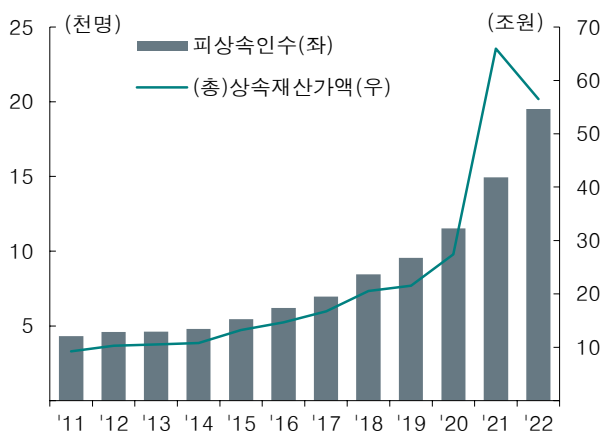
황 선 경 연구위원

과거 상속세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대중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속세율이 높은편에 속하는 나라로 대중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매우 크다. 이에 최근 절세를 위해 상속플랜을 수립하려는 대중층이 늘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 증가해 6년 후 인구의 1/4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상속 관련 서비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수요를 자산 및 손님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최근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일반대중으로 확대되는 추세

-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
 - 2022년 기준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사망자의 약 5%인 19,506명, 총상속재산가액은 56.5조 원으로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 모두 5년 전 대비 3배 증가
 - 총상속재산가액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구간의 납세인원이 8,510명(43.6%)으로 가장 많고 인별 평균 총상속재산가액은 약 13억 원
-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10억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 아파트 1채만 보유해도 잠재적 상속세 대상자
 -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범위가 상이하나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세금 미발생
- 상속 경험이 있거나 향후 상속을 할 의향이 있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70%가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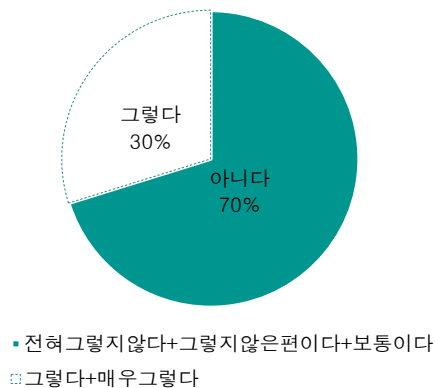
■ 상속세 납세인원 및 총상속재산가액 현황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 상속세에 대한 인식

"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이야기다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세부담이 큰 편

-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평균 15%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
 - OECD 가입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24개국이며, 7개국은 비과세, 나머지 10개국은 자본이득세, 추가소득세로 과세
 -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가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총 조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2.42%(OECD 평균 0.42%)를 차지
- 우리나라는 상속세법 제정(1950년) 이래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유산취득세 방식 대비 세부담이 큼
 -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상속세를 부과해 총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 대비 과세표준이 낮아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감소

■ 일부 부유층은 세부담으로 상속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민을 선택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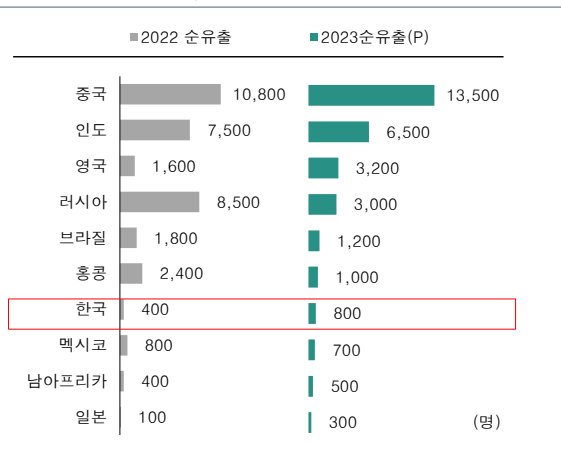
- 2023년 국내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 중 이민을 간 사람은 800명으로 전 세계 7위를 차지
 - 국제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타국으로 이주한 부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며 다음으로 인도, 영국 순
 - 한국은 7위를 차지했으나 총 인구수 대비로는 중국보다 비율이 높으며(중국 1/1000, 한국 2/1000)미국, 캐나다, 호주 등 상속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곳으로 이주
- 선진국들은 높은 상속세로 인한 자국민 이탈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상속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추세로 상속세의 원조격인 영국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 197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노르웨이(2014년), 오스트리아(2008년), 멕시코/스웨덴(2004년)등 OECD국 10곳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

■ OECD 회원국의 상속에 대한 최고 세율

세율	국가	세율	국가
55%	일본 ●	20%	그리스, 네덜란드
50%	대한민국 🇰🇷	19%	핀란드
45%	프랑스	15%	덴마크
40%	영국, 미국	14%	슬로베니아
34%	스페인	10%	아이슬란드, 터키
33%	아일랜드	7%	폴란드, 스위스
30%	벨기에, 독일	4%	이탈리아
25%	칠레	0%	스웨덴, 호주 외
OECD 평균 세율		15%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21년 기준)

■ 세계 부자들의 이동 양상



자료 :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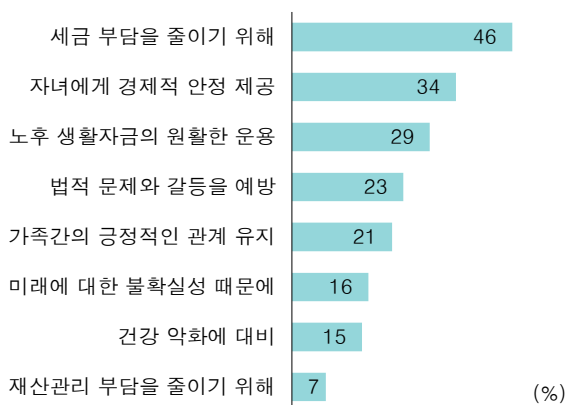
■ 대중들에서 절세를 위해 가능한 빨리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 전문가의 도움을 기대

- 상속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46%)>자녀의 미래에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34%)>노후 생활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29%)
 - 상속경험자의 약 60%가 상속세에 부담을 느끼며, 1/4은 매우 부담된다고 느낌
- 연령층이 낮을수록 상속을 위한 준비를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
 - 40대의 28%, 50대의 23%, 60대 이상의 19%가 빨리 준비할수록 좋다고 생각
 - 실제 상속 경험자의 경우 40% 이상이 준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음
- 상속 계획 수립시 전문가를 통한 절세 상담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
 - 절세 상담서비스 이외에 법률상담, 상속 절차 대행, 장기적 자산관리, 유언장의 집행자 역할 등의 서비스 니즈가 높음

■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조 특성상 여전히 주택 상속 의향이 가장 높으나, 젊은층에서는 주식 등 투자상품을 비롯해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또한 긍정적으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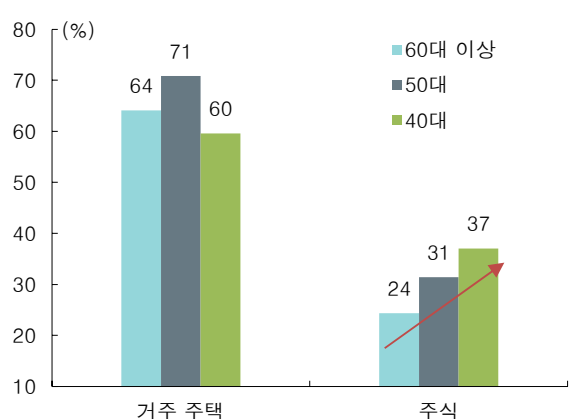
- 상속할 자산 유형으로 거주중인 주택을 고려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나 연령층이 낮을수록 주식을 고려한다는 비중이 증가
 - 40대의 주식 상속 의향은 37%로 60대 이상 상속 의향자의 1.5배 수준
 - 상속을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자산 유형도 주택, 주식을 선호하고 40대에서는 주택보다 주식 상속을 고려하는 비중이 더 높음
- 상속 계획자 2명 중 1명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제공 중인 유언대용신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자의 40%는 향후 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

■ 상속설계가 필요한 이유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상속 의향 자산 유형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유언대용신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내 설정대로 분쟁 없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과 유언 집행의 주체가 금융기관임을 신뢰하기 때문으로 확인

■ 금융사는 상속 준비 수요에 대응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로 생전 자산관리부터 유언장의 보관, 상속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산정리서비스를 시행(4.18)
 - 2010년 유언대용신탁을 선보인 리빙트러스트 브랜드를 확장해 증여·상속·기부·연금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실행이 가능한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
 - 일본의 신탁전문은행 스미트러스트와 전략적 제휴, 법무·세무법인, 병원 등 전문가 관과 협업을 통해 상속 집행 관련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
- (신한은행) 최근 커지고 있는 상속·증여와 관련된 손님의 요구에 부응해 신탁 기반의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특화채널 신한 신탁라운지를 오픈(4.25)
 - 각종 신탁상품을 활용한 맞춤형 상속 설계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가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제공

■ 상속에 대한 대중의 관심 고조와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상속 관련 서비스 수요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금융사는 이를 자산 및 손님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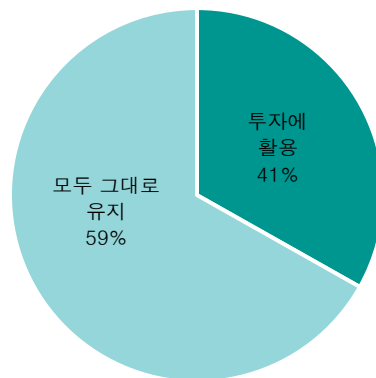
- 상속은 주거래 은행 변경 계기가 되기도 하며 비거래 상속인의 상속 자산 신규 유치 및 운용, 거래 손님의 자산규모 확대 기회로도 작용
 - 상속인의 약 20%는 주거래 은행 변경 경험, 40%는 상속자산을 투자에 활용
- 금융기관의 상속관련 서비스 제공 기대, 주식 상속 의향 증가, 유언대용신탁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금융회사에게 손님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 하나은행 유산정리센터의 역할

항목	내용
상속 프로세스 간소화	· 재산현황파악, 문서처리, 세제/법제 프로세스 간소화 서비스
법률/세금 문제에 대한 전문가	· 법률 및 세금 관련 조연, 상속인간 중재자 역할
부동산 관리 및 처분	· 부동산 평가, 매도, 관리 서비스
신탁의 집행자	· 상속인간 정서적 지원
네트워크 지원	· 변호사, 회계사, 감평사, 공증인 등
맞춤형 유산계획	· 가족관계, 기부, 재무목표 등을 고려한 자산 로드맵 수립
유산정리 교육 센터	· 상속 관련 지식 교육으로 상속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
장기적인 관계 구축	· 상속인과 장기 관계 구축으로 2,3차 상속 절차에도 도움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상속(증여) 자산의 유지 상태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레그테크를 활용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김종현 연구원

최근 국내외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의 레그테크(Reg-tech) 지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레그테크란 규제 준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로 글로벌 금융사들은 자금세탁방지(AML), 이상거래탐지, 고객인식(KYC) 등에 활용하며, 최근 AI 기반의 솔루션을 통해 규제 준수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금융사 역시 2018년 이후 도입을 확대 중인 가운데 레그테크 고도화를 통한 금융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은행의 레그테크(RegTech)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규제 준수와 관련된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법
 - 글로벌 금융사들은 자금세탁방지(AML), 이상거래탐지, 고객인식(KYC) 등에 활용
- 은행은 감시인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기, 횡령,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금융사의 레그테크 솔루션 도입 필요성이 확대¹⁾
 - 지속적인 수요 확대로 인해 전 세계 레그테크 시장 규모는 '19년 53.2억 달러에서 '27년 217.3억 달러로 증가하며 연평균 19.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레그테크는 머신러닝, AI 등의 발전을 바탕으로 더욱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공


- 레그테크 시장은 은행들의 금융사고 증가와 관련 규정 준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솔루션도 급격히 증가
 - 사기를 방지하고 금융 기관이 고객 인식(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AI 기반 레그테크 솔루션의 수요가 확대
- 오픈뱅킹의 확산에 따라 고객 확인(KYC)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금융기관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분산된 네트워크에 저장된 본인 인증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개인정보의 집중 관리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
 - HSBC, MUFG, OCBC 등은 KYC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개념 검증을 성공(2020)
- 한편, MRC(기계 독해) 기술은 AI가 텍스트를 독해하고 사람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술로 복잡한 약관, 법규의 해석에 활용하여 일관되고 자동화된 규제 관리가 가능

[1] "Trends 2024: Bank Spending on RegTech Will Reach New Heights in 2024", The Financial Brand, 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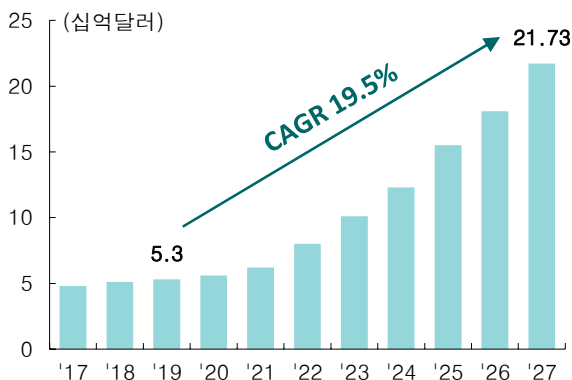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사는 레그테크를 활용하여 규제 검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오류를 감축

- JP모건은 대출 계약서 검토 작업에 AI 기반 계약서 검토 소프트웨어 ‘COiN’을 도입하여 검토 시간과 오류를 획기적으로 감축 (2016)
- KfW IPEX-Bank는 EU의 신규 AML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해 ACTICO社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관련 요구사항을 지원 (2019)
- ING와 CommBank는 신속한 규제 대응을 위해 Asecnt社의 레그테크 솔루션을 도입하여 유럽 보안 규정인 MiFID-II와 MiFIR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2.5분에 완료 (2023)
 - Ascent의 기술은 매년 규정 준수 담당자의 시간을 최대 49%까지 절약할 것으로 예상
- 한편, BIS는 레그테크와 수프테크 (Suptech, 규제 감독 기관을 위한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통화 정책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 중 (2024)^[2]

■ 국내 금융사는 레그테크 고도화 및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 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 국내 금융사는 2018년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일부 업무영역에 레그테크 기술을 도입하여 AML과 이상거래탐지 등에 활용
- AI, 빅데이터 등 기반 기술의 발달로 인해 레그테크 솔루션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신용 위험 및 신용 인수 의사 결정 등으로 적용 분야의 확대가 가능
 - 아울러 여신과 상품판매 등에 특화된 시스템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필요
- 글로벌 주요 금융사는 레그테크 기업과 제휴하거나 지분투자, 인수 등을 통해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으며^[3], 국내 금융사 역시 레그테크 고도화를 통해 금융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필요 

■ 글로벌 레그테크 시장규모 전망



자료 : KBV Research

■ 레그테크 분류체계



자료 : KPMG (A user's guide to RegTech)

[2] “BIS Innovation Hub expands supotech and regtech research to include monetary policy tech”, BIS, 2024.3

[3] “Companies Prefer Regtech Vendors than In-House Solutions: IHS Markit”, Finance Magnates, 2022.5

투자 가뭄 속에서 핀테크 옥석 가리기

정안선 연구원

최근 코로나 시기 급증했던 핀테크 시장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질적 요소의 중요성 확대로 핀테크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었다. 핀테크 기업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의 단점으로 지목된 보안과 신뢰성 관련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블록체인 도입, 휴먼터치 가미 등의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은행은 핀테크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해 전략적 협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최근 핀테크 시장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질적 요소의 중요성이 확대^[1]

- '20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던 핀테크 시장의 투자는 미 연준의 긴축통화정책 이후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23년 전년대비 42% 하락하며 354.5억 달러를 기록 - AI에 대한 관심으로 '23년 하반기부터는 자금조달 위축 속도가 둔화
- 이런 가운데 VC 미집행 투자금이 '22년 5,302억 달러에서 '23년 5,666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다수의 VC는 여전히 핀테크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고자 노력^[2]
- McKinsey에 따르면 도전적인 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던 이전과는 달리 '23년에는 임베디드 बैं킹, Baas, B2B 서비스 등 높은 수익성을 보인 분야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지속가능성, 수익성을 비롯한 질적 요소의 중요성이 확대됨^[3]

■ 핀테크는 백엔드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데 기여

- 은행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출과 계좌 개설 업무의 생산성 증대, 손님에게 새로운 서비스 제공, 예금 규모 확대, 비용 절감 등의 효과 거둠
- (HSBC&Tradeshift) 기업 고객이 글로벌 공급망과 운전 자본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간 자본 이동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관리
- (Goldman Sachs&Stripe) Stripe의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통해 고객의 거래이력, 소비 행동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마케팅을 수행해 고객 참여 및 충성도 제고

[1] "Decline in Fintech Funding Creates New Opportunities for Banks", The Financial Brand, 2024.4.23

[2] "Fintech Funding Halved Last Year, But VCs Are Excited About These Areas And Deals In 2024", Crunchbase, 2024.1.12


[3] "Fintechs: A new paradigm of growth", McKinsey, 2023.10.24

- (OCBC&MS Azure) 임직원용 생성형 AI 기반 ‘OCBC GPT’를 개발해 보고서 작성, 번역, 손님 응대 등에서 효율성을 제고해 소요 시간을 50% 가량 감축
- (Citi&IntraFi) 미국 계좌를 보유한 기관 고객이 타국 은행 계좌로 현금을 이체해 이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IntraFi Yankee Sweep’을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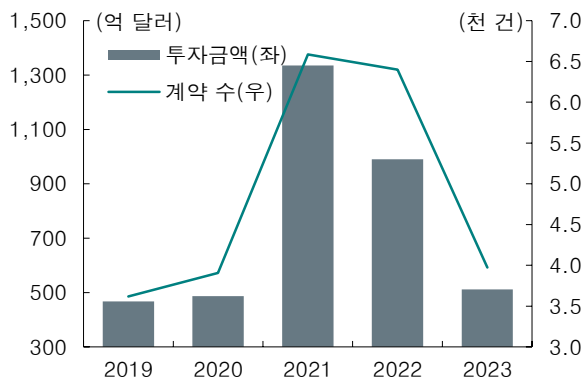
■ 또한, 핀테크의 단점인 보안, 신뢰성 관련 이슈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

- 핀테크는 금융 정보의 데이터화로 인해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과 대면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손님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
- 온라인상의 거래를 위조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에 휴먼터치를 더해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고객 신뢰를 제고
 - (JPMorgan) 데이터, 디지털 자산 등의 안전한 교환 및 보관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사업부 Onyx 설립(2020.10.)
 - (U.S Bank) 자사업에 고객의 목표를 입력하면 직원들이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Life Moments’ 기능을 추가(2023.12.)

■ 국내은행에도 핀테크 도입이 확대된 가운데 질적 요소를 기반으로 협업 고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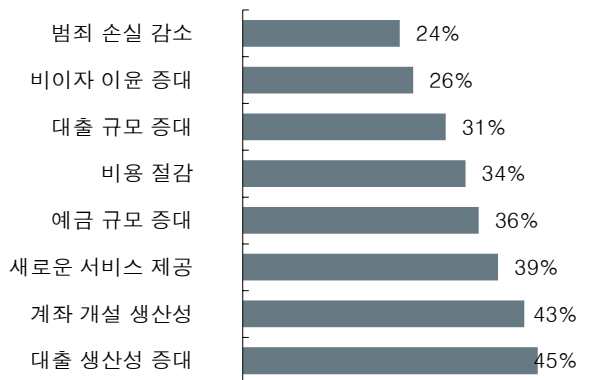
-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따라 국내 주요 은행에서 핀테크와의 협업이 확대되는 추세
 - (하나-파운트)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등 퇴직연금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해 협력
 - (신한-카카오페이)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이 자동이체 되는 ‘쓸수록 모이는 소비 적금’ 출시
 - (우리-네이버페이) 네이버포인트 적립, 공항라운지 무료 등 폭넓은 혜택의 체크카드 출시
- 핀테크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상황에서 은행은 질적 요소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술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해 전략적 협업을 고도화할 필요 

■ 핀테크 시장 투자 추이



자료 : Innovate Finance

■ 은행이 핀테크와 협력하는 이유



자료 : Cornerstone Advisors

금리: 파월의 고용 증시 발언 부각되며 하락

김 용 태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PCE물가·고용비용지수 예상치 상회로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높아졌으나 비둘기파적 FOMC와 美 고용지표 둔화로 하락했다. 국내 금리도 美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속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며 하락했다. FOMC에서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후퇴를 인정하면서도 금리인상 옵션을 배제하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향후 국내외 금리는 美 경기 모멘텀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하방압력이 우세하나, 주요 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금리는 비둘기파적 FOMC와 美 고용지표 둔화로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되며 하락

- 美 3월 PCE/근원PCE물가지수와 1/4분기 고용비용지수가 예상을 상회해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높아지며 5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경계가 확대
 - 시장은 정책 기대치를 크게 낮추고('24년 1회 vs 3월 점도표 3회) FOMC를 대비
- 5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 평가를 하향하고 필요시 현 기준금리 수준을 오래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이 우려한 금리 인상 옵션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하고 예상을 상회하는 양적긴축 감속 규모를 발표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
- 美 재무부 국채발행계획도 예상에 부합하면서 국채 공급 우려가 완화되고 4월 고용지표도 예상을 하회하면서 채권 매수 심리가 개선
 - 비농업고용순증/실업률(만 명, %): 3월 31.5/3.8 → 4월 17.5/3.9 (예상 23.8/3.8)
- 글로벌 금리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美 경기모멘텀이 둔화되며 상승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4.26일 5.01/4.67 → 5.3일 4.83/4.51 → 9일 4.83/4.46


■ 국내 금리는 美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속 헤드라인 물가 재상승 우려 제한되며 하락

-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반등에도 정부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과 서비스 물가 둔화 등으로 예상을 하회하면서 2%대 재진입 (2.9%, 예상 3.0%)
- 한은 총재는 4월 금통위에서 '고유가 장기화 시 헤드라인 물가 전망경로가 상향되며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했으나 중등 긴장 완화로 유가도 안정되며 우려 제한
- 韓 금리는 대외發 금리 하락 압력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영향으로 상승
 - 국고 3/10년 금리(%) : 4.26일 3.53/3.69 → 5.3일 3.50/3.61 → 10일 오전 3.43/3.53

■ FOMC,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후퇴 인정에도 금리인상 옵션을 배제하며 정책 기조를 유지

- 5월 FOMC에서 연준은 성명문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 하향에도 전반적인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기준금리 동결(상단 5.50%)과 양적긴축 속도 조절을 발표
 - 최근 2% 물가 목표로 향해가는 과정의 진전이 부족(lack of further progress)하다는 문구를 추가했음에도 포워드 가이드는 유지해 인상으로의 정책 전환 가능성은 제한
 - 6.1일부터 양적긴축(QT)의 속도 조절을 발표(기존 월 950억 달러→월 600억 달러)
- 기자회견에서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unlikely)하고 연준의 양대책무 중 고용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언급해 물가 반등에도 기존 정책경로를 고수하는 모습을 확인
 - “현재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고 수요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며 최근 물가 상승이 기존의 울퉁불퉁(bumpy)한 디스인플레이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모습
-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 우려하던 금리인상 옵션에 대해 단호히 부정하고 시장 예상(월 650억 달러)보다 높은 QT감속 규모를 발표한 점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

■ 美 경기 모멘텀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하방압력 우세하나 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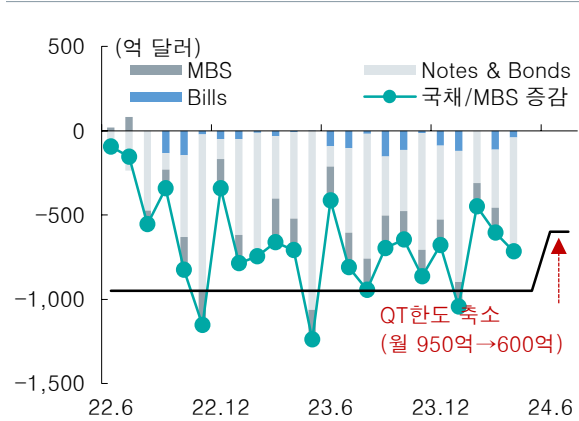
- 시장의 정책 기대치가 크게 낮아진 상황('24년 1.5회 인하)에서 연준이 금리인상 옵션을 배제하고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을 유지해 정책 불확실성은 완화
- 美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는 가운데 연준의 QT감속 및 바이백 시행(5~7월)과 예상에 부합한 美 재무부 국채발행계획 발표로 美 국채 수급 환경도 점차 개선될 전망
- 국내 금리는 美 국채 수급 환경 개선과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당분간 하방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나 주요 지표 발표(美 4월 CPI, 5월 금통위 수정경제전망)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35%~3.55%, 3.45%~3.65% 범위로 전망 

■ 미국 10년물 금리와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ESI)



자료 : Bloomberg

■ 연준 양적긴축(QT) 추이



자료 : Fred

외환: BOJ와 시장 간 ‘맞다이’

진 옥 희 연구원

엔/달러 환율이 급락한 가운데 5월 美 FOMC가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되며 원/달러 환율은 한때 1,350원대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단, 이후 연준 인사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과 우호적인 美 경제전망이 맞물리며 달러화가 약세폭을 축소하자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에 복귀하였다. 향후 원/달러 환율은 그간의 불안요인이 완화되고 있지만,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도 달러화 강세 압력이 상존한 가운데 추가 하락보다는 1,300원대 후반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美 고용시장 둔화 조짐 속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강화되며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5월 FOMC가 완화적으로 평가된 가운데 美 4월 고용지표 둔화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자 하락
 - 엔/달러 환율은 4.29일 日 외환당국 시장 실개입(추정)에 힘입어 장중 3.5% 하락
 - 美 4월 비농업고용이 17.5만 명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인 24만 명 증가를 큰 폭으로 하회한 가운데 실업률도 3.9%로 증가하며 예상(3.8%)을 상회
- 다만, 이후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가 3%대 물가가 고착화될 경우 제약적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낙폭을 축소하며 1,360원대 마감


■ [국제 환율] 달러화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은 파월의 완화적 발언 등으로 약세

- 달러화는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파월 발언 등으로 약세 이어갔으나, 美 경제 전망 호조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대두되자 낙폭 축소
 - CME Fed Watch 2024년 금리 인하 전망: 4.30일 1회(11월) → 5.8일 2회(9, 12월)
- 유로화는 달러화 약세 속에 유로존 경기 개선에 힘입어 강세를 시현했으나, 스웨덴 중앙은행이 스위스에 이어 금리 인하(25bp, 3.75%)를 단행하자 상승폭 축소
 - 유로존 1Q GDP가 전기비 0.3% 성장하며 예상(0.1%)을 상회한 데 이어 4월 종합 PMI도 51.7로 집계되며 전월비 상승하는 등 유로존 경기 여건 개선
- 엔/달러 환율은 완화적 BOJ 여파 속에 한때 160엔을 돌파하며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美·日 금리차 축소와 日 당국의 시장 개입 경계감이 이어지자 하락
- 위안/달러 환율은 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경기부양 의지와 확장국면을 이어간 PMI 지표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달러화 강세 전환 속에 낙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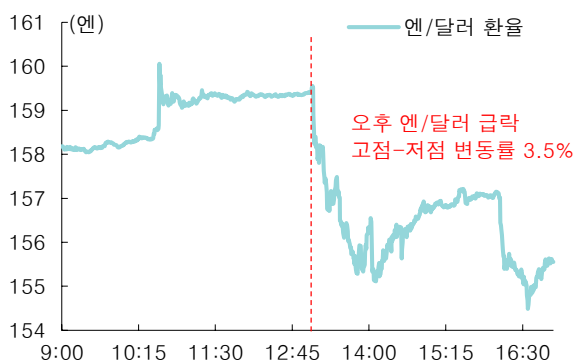
■ **日 외환당국과 시장 간 줄다리기 속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 당분간 확대될 소지**

- 엔화는 BOJ가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국채 매입 규모도 유지하자 美·日 간 정책 차별화가 부각되며 달러당 150엔 후반까지 상단을 높이며 약세
 - 아울러 우에다 총재의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발언도 엔/달러 환율 급등에 일조
- 엔화에 대한 투기적 매도가 맞물리며 4.29일 엔/달러 환율이 장중 160엔을 상향 돌파하자 日 외환당국의 실개입(추정) 속에 엔화는 달러당 155엔까지 급락
- 日 당국의 개입 능력과 의지를 감안할 때 당분간 시장 개입 경계감 이어질 전망
 - 외환보유액 중 엔화 매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 비중이 확대(23.4월 10.8% → 24.4월 12.3%)된 가운데 스텔리 日 재무상은 4월 중순 韓·美·日 및 G7 회동을 통해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원·엔화 간 높은 동조성('21년 이후 상관계수 0.9)을 감안할 때 원화는 시장과 日 당국 간의 줄다리기에 따른 엔화 변동성에 맞물리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소지

■ **원화는 그간의 불안요인 완화에도 달러화 강세 압력 감안 시 불안정한 흐름 이어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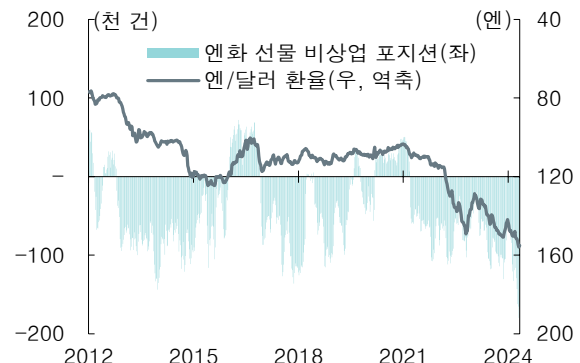
- 4월 배당 시즌 종료와 중동發 지정학적 리스크 소강 등 그간의 원화 약세를 견인한 요인들이 완화되며 원/달러 환율의 눈높이는 낮아진 상황
 - 아울러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무역흑자 지속 등 수급여건 개선도 원화 가치에 긍정적
- 단, 되살아난 美 금리인하 기대에도 유럽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속에 달러화 강세 압력 잔존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
 - BOE 총재는 5월 금리를 동결했으나 향후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
- 이에 원/달러 환율은 美·유로존 물가 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당분간 높은 변동성 지속되며 향후 2주간 1,340~1,390원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 4.29일 엔/달러 환율 추이



주 : 30초 단위
자료 : 인포맥스

■ 日 엔화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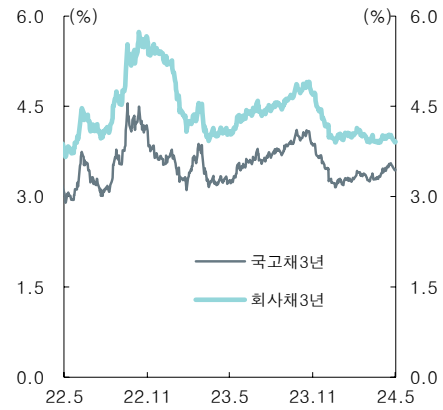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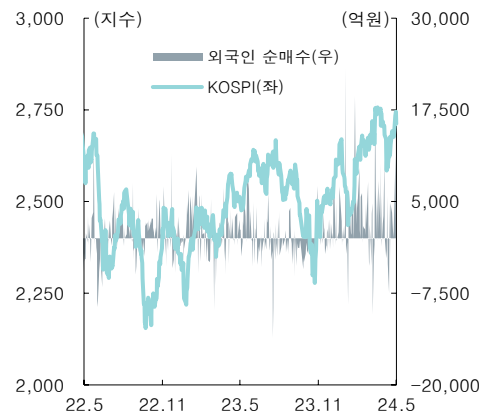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4월말	3.66	3.57	3.65	4.00	3.53	3.59
5월 2일	3.49	3.57	3.64	3.97	3.51	3.56
5월 3일	3.48	3.58	3.65	3.96	3.50	3.55
5월 7일	3.50	3.58	3.62	3.91	3.45	3.48
5월 8일	3.49	3.58	3.61	3.90	3.44	3.47
5월 9일	3.50	3.58	3.63	3.91	3.45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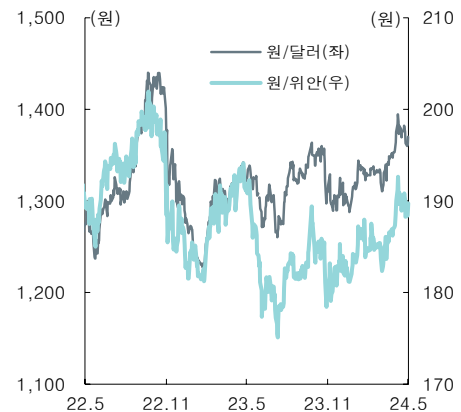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4월말	2,692.1	113,471	460	2,384
5월 2일	2,683.7	90,591	351	27
5월 3일	2,676.6	78,504	339	945
5월 7일	2,734.4	111,537	532	11,155
5월 8일	2,745.1	102,936	436	4,001
5월 9일	2,712.1	111,028	424	-3,587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4월말	1,382.0	875.7	190.8	1,473.8
5월 2일	1,375.9	895.4	190.0	1,475.6
5월 3일	1,362.8	890.7	188.3	1,466.5
5월 7일	1,360.1	879.1	188.4	1,462.5
5월 8일	1,361.5	875.2	188.5	1,463.3
5월 9일	1,370.1	881.1	189.7	1,4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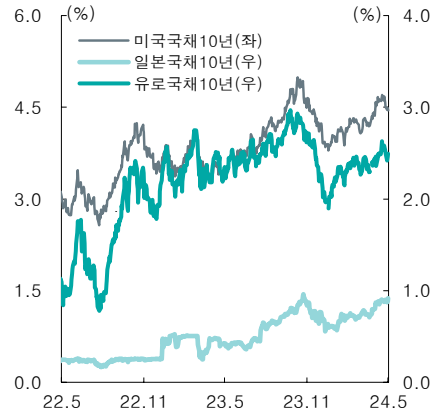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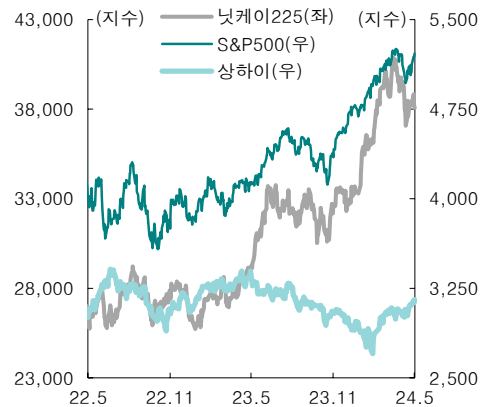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4월말	5.33	5.33	5.04	4.68	0.88	2.58
5월 2일	5.33	5.34	4.87	4.58	0.90	2.54
5월 3일	5.33	5.33	4.82	4.51	0.90	2.50
5월 7일	5.33	5.32	4.83	4.46	0.87	2.42
5월 8일	5.33	5.33	4.84	4.49	0.88	2.46
5월 9일	-	5.32	4.82	4.45	0.92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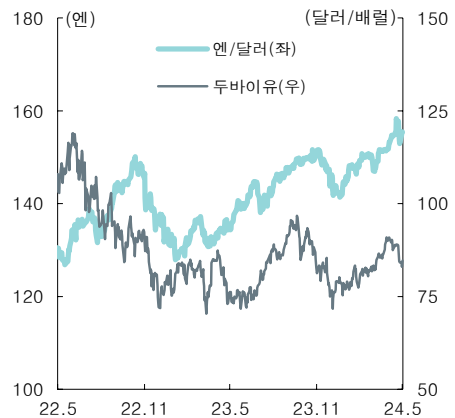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4월말	5,035.7	38,405.7	3,104.8	4,921.2
5월 2일	5,064.2	38,236.1	-	4,890.6
5월 3일	5,127.8	-	-	4,921.5
5월 7일	5,187.7	38,835.1	3,147.7	5,016.1
5월 8일	5,187.7	38,202.4	3,128.5	5,038.2
5월 9일	5,214.1	38,074.0	3,154.3	5,054.4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4월말	157.78	1.066	88.6	2,302.9
5월 2일	153.58	1.073	84.5	2,309.6
5월 3일	152.95	1.076	84.1	2,308.6
5월 7일	154.68	1.075	84.1	2,324.2
5월 8일	155.49	1.075	83.0	2,322.3
5월 9일	155.44	1.078	84.7	2,340.3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10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4년 5월 10일 인쇄

2024년 5월 13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10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